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2차 토론회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 수



2021년 10월 22일 (금), 오후 3시~

육아정책연구소 9층 대회의실

주최/주관

육아정책연구소, 교사노동조합연맹,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국회의원 김민석(보건복지 위원장)
국회의원 강득구, 강민정, 김병욱, 김종민, 윤영덕, 이은주 (가나다순)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 수

- 주제 :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 수
- 일시 : 2021. 10. 22(금), 15:00 ~ 18:00
- 장소 :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구분	시간	내용
개회	15:00~15:10	환영사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축사 국회의원 이은주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정지현 공동대표
집담회	15:10~18:00	사회 및 facilitator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 발표 1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왕정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위원장) 발표 2 김경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정책조정위원장) 이주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중앙이사) 자유토론 발표 3 이종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 발표 4 도승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부지부장) 자유토론, 질의응답, 추가토론 마무리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 수

2021년 10월 22일 (금), 오후 3시~ 육아정책연구소 9층 대회의실(온라인 줌회의실)

▶ 유튜브 생중계

육아정책연구소_KICCE, 교사노조연맹 TV



주최/주관

육아정책연구소, 교사노동조합연맹,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국회의원 김민석(보건복지 위원장)
국회의원 강득구, 강민정, 김병욱, 김종민, 윤영덕, 이은주 (가나다순)

후원/연대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의 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용인교육시민포럼,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사)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행복한 미래교육포럼 등(가나다순)

진행순서

구분	시간	세부내용
개회	15:00 ~ 15:10	■ 환영사: 박상희(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축 사: 국회의원 이은주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정지현 공동대표
집담회	15:10 ~ 18:00	사회 및 facilitator: 박창현(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 1차 토론회 결과보고 및 인트로, 집담회 참여 규칙 발표 1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왕정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위원장) 발표 2 김경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정책조정위원장) 이주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도담유치원 원감) 자유토론 발표 3 이종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함미영 (공공문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 발표 4 도승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부지부장) 자유토론, 질의응답, 추가토론 마무리

연속 토론회 순서

- 1차: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체제 이대로 괜찮은가? (9.30)
- ▶ 2차: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 수 ◀
- 3차: 국가교육회의 유아교육의제
- 미래 유아교육의 방향과 실행, 전달체계를 위한 제언
- 4차: 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은?
- 5차: 미래 유아특수교육의 방향과 과제
- 6차: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 의제

※ 사전등록 후 자료집 다운 가능, 사전등록 링크 추후 배포

CONTENTS

환영사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축사

국회의원 이은주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정지현 공동대표

집담회

- 발표 01 |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7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12
왕정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위원장) 16
- 발표 02 | 김경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정책조정위원장) 25
이주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중앙이사) 28
- 발표 03 | 이종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35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 40
- 발표 04 | 도승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부지부장) 47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2차 토론회: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수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상희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토론회 중, 2차 토론회인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 수>를 육아정책연구소와 교사노조연맹,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그리고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들과 다시 함께 개최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은주 국회의원님과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님이 축사를 해주시어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육아정책연구소와 교사노조연맹과 여야 의원님들, 다양한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9월 말에 1차 토론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어 최근 가장 핫 이슈가 되는 유아무상교육과 의무교육, 유아학교와 유보통합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을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2차 토론회는 교사들이 모두 모여 집담회 형식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최적의 학급당 유아 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구조적 질인 교사 대 아동비율, 학급당 유아 수는 미래 유아교육과 보육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이며 중요한 안전입니다. 오늘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입장별로 다양한 의견들을 제안해주시고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적의 교육과 보육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에 사회를 맡아주신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님, 집담회의 발제를 맡아주신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님,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노조 위원장님, 왕정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위원장님, 김경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정책조정위원장님, 이주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도담유치원 원감선생님, 이종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님,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님, 도승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부지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 더 나은 정책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입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 수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유치원은 유아가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거듭나는 최초의 교육과 교류의 장입니다.

이 시기에 습득하는 각종 사회적 기술이 인격체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 사회는 모든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고루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유치원이 속한 지역과 공립·사립 등에 따라 교육 환경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학급 당 유아 수에 대한 적절한 편성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달려있는 현재의 유아교육은 과대, 과밀학급을 낳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역시 불균등해지는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 한 명 한 명을 충분히 관찰하고 놀이를 지원해주는 등 상호 작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미 제도화가 진척된 초·중·고와 달리 유아교육은 지금까지 학급 당 적정 정원 문제를 비롯, 여러 교육 환경 문제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 시키고 유아 교육정책에 대한 의회와 정부, 사회 전반의 인식을 환기하고자 유아교육 학급당 학생수의 기준을 설정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물론 제가 낸 법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의회 안팎의 토론 과정에서 학급당 유아 수의 적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컨센서스가 보다 증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유아교육의 미래와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유아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저와 정의당도 국회에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입니다.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며 매우 반가웠습니다. 제가 8개월된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돌도 안된 딸을 어린이집에 보낼지 말지 고민할 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마을이 해체되었고, 저희 가족은 양가 조부모님이 모두 지방에 거주하고 계셔서 부모가 아이 양육을 오롯이 책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렇다보니 어린이집은 저희 가족에게는 아이를 함께 키우는 마을이자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아이를 함께 키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서로에게 보내는 신뢰와 지지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인 논의를 열어가는 연대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결정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와 교사노조연맹, 그리고 보건복지 위원장이신 김민석 의원님과 강득구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 김병욱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윤영덕 의원님과 함께 개최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 활발하게 현장의 의견을 발표해주실 발표자들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님, 집담회의 발제를 맡아주신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님,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노조 위원장님, 왕정희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위원장님, 김경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정책조정위원장님, 이주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도담유치원 원감선생님,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님,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님, 도승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부지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1

우영혜 |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윤지혜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왕정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위원장



미래 유아학교의 학급당 적정 유아 수

우영혜 |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유아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역 중 하나는 교사가 몇 명의 유아를 교육하는지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 대 유아의 상호작용, 교사가 한 유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은 교사 대 유아의 적정 비율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생활화되면서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학급당 유아 수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에, 현재 유치원 교원 대 유아 비율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시한 교사 대 유아 비율을 알아보고,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급당 적정 유아 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유치원 교원 대 유아 비율

가. 유치원 교원 1인당 유아 수

2021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유치원 교원 1인당 유아 수는 국공립 8.7명, 사립교원 12.2명으로 사립유치원 교원 1인당 유아 수가 3.5명 정도 많습니다. 이는 교사, 수석교사, 원감, 원장을 포함한 자료이므로 실제 연령별 정원에 충원한 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괴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표 1〉 유치원 교원 1인당 유아 수

구분	국공립	사립	전체
교원	20,304	33,153	53,457
유아	177,361	405,211	582,572
교원 1인당 유아 수	8.7	12.2	10.9

※ 교원은 교사, 수석교사, 원감, 원장을 포함

자료: 교육부 유치원 현황(2021.4.1. 교육통계자료 중 일부 발췌)

나. 시·도 교육청별 학급당 유아 수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는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에 의거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를 관할청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 시·도 교육청별 학급 당 유아 수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연령별 한 학급당 유아 수는 3세 14~19명, 4세 19~25명, 5세 22~28명으로 17개 시·도 교육청별 차이가 있으며, 공립과 사립을 구분해서 제시한 교육청은 서울,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등 6개 교육청입니다.

〈표 2〉 시도교육청 유치원 연령별 학급정원

2021년

구분	단일학급			혼합연령	비고
	3세	4세	5세	3~5세	
서울(공립) (사립)	16 16~20	22 22~24	24 24~28	22 22~24	
부산	16	24	26	22~26	
대구	18	24	28	20~26	
인천	18	23	26	23	
광주	18	22	25	22	
대전	15	22	26	22	
울산	17	23	26	23	
세종	14	19	23	18	
경기(공립) (사립)	16 16~18	22 22~24	26 26~28	16~22	
강원(공립) (사립)	16 16~24	22 22~26	24 24~28	16~20 16~24	
충북	15	20	23	18	
충남	15	20	25	15~20	
전북(공립) (사립)	14 16	18 20	22 25	16~18 18~24	
전남	15	20	22	16~20	
경북(공립) (사립)	16 16~18	22 22~24	24~26 24~26	20~24	
경남(공립) (사립)	16 19	22 25	24 28	18~20 24	
제주	15	22	26	18~22	

자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2021.8.)

2. 교사 대 유아 비율의 적정 기준

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기준 개선안: 전문가의 의견

교사 대 영유아 비율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교수, 장학사, 유치원 원장, 공무원,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하여 제시한 ‘영유아 교육·보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김은설, 이재희, 박은영, 김정숙, 2016)’에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적정 기준을 유치원의 경우 3세는 교사 대 유아가 13명, 4세는 17명, 5세는 21명을 한 사람의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3세 11명, 4세 15명, 5세 16명의 기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이 여전히 교사 대 유아 수는 같은 연령이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준안이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유치원은 일일 4~5시간의 교육과정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하였고, 어린이집은 12시간 종일반을 기준으로 하여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8시간 이상 방과후 과정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4~5시간 교육과정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은 현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표 3〉 유치원과 어린이집 연령별 적정 교사 대 영유아 수(안)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0세	1 : 2 (현행 1:3)	-
1세	1 : 4 (현행 1:5)	-
2세	1 : 6 (현행 1:7)	-
3세	1 : 11 (현행 1:15)	1 : 13 (현행 1:16)
4세	1 : 15 (현행 1:20)	1 : 17 (현행 1:24)
5세	1 : 16 (현행 1:20)	1 : 21 (현행 1:28)

자료: 김은설·이재희·박은영·김정숙(2016), 영유아 교육·보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59

나. 국회 이탄희 의원 대표 발의(학급 당 학생 수 20명 이하)

지난해 국회에서 이탄희 의원 대표 발의로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146, 이탄희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에는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할 것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 수의 단계적 감축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에서는 교육부에 공동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유아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면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를 현재보다 감축해야 하며, 유아 놀이 중심 누리과정의 실현, 코로나19 시기의 안전한 유치원 운영, 교원 근무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령별 학급당 유아 수 감축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법률상 명시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146, 이탄희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유치원의 경우 연령별 학급당 유아 수 기준 설정을 보완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 유아 배치기준 지침 시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학급당 유아 수 완화를 단계적으로 계획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 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 유치원 교원 의견: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에서 2021년 5월 20일~23일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대상으로 유아교육 현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학급 당 유아 수에 대한 설문 결과 적정 상한선을 16명 이하(28.9%), 12명 이하(24.9%), 14명 이하(23.6%) 순으로 전체 교원의 77.4%는 적정 학급 규모를 16명 이하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실제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유아 수는 15명 이상 75.6%, 20명 이상 53.0%, 25명 이상 16.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현황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 연령별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인구 밀집 지역이나 단설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정원을 충족하므로 유아 수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유치원 교원들은 학급의 유아 수 과밀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실내 교육활동 및 체험학습 운영의 어려움’으로 개별화 교육과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유아 안전 사고 발생 증가’,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어려움’, ‘유아 간 갈등 및 학부모 민원 증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원 교원들은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를 3세 12명, 4세 14명, 5세 16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 4〉 유치원 학급당 적정 유아 수

구분	3세	4세	5세
유아 수	12명	14명	16명

자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

미래 유아학교는 유아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놀이 중심 누리과정 정착이 되어야 하므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유치원 교사 대 유아 수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감축, 과밀학급 해소 등에 대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도적 개선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교육부(2021). 유치원 현황(2021.4.1. 교육통계자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146, 이탄희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교육청(2021). 경기 유아교육 정책 추진 기본계획.

김은설·이재희·박은영·김정숙(2016). 영유아 교육·보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서울시교육청(2021). 서울유아교육계획.

이재희·김은설(2017).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적정 기준 마련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2021). 설문조사자료.

OECD(2019). Education at a glance.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수

윤지혜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1. 현황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6조(학급수 및 학급당 유아 수)에 따르면,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2021학년도 기준 시도교육청 유치원 학급 편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 2021학년도 시·도 교육청 유치원 학급 편성 기준(명)

구분	단일학급			혼합연령	비고
	3세	4세	5세	3~5세	
서울(공립) (사립)	16 16~20	22 22~24	24 24~28	22 22~24	
부산	16	24	26	22~26	
대구	18	24	28	20~26	
인천	18	23	26	23	
광주	18	22	25	22	
대전	15	22	26	22	
울산	17	23	26	23	
세종	14	19	23	18	
경기(공립) (사립)	16 16~18	22 22~24	26 26~28	16~22	
강원(공립) (사립)	16 16~24	22 22~26	24 24~28	16~20 16~24	
충북	15	20	23	18	
충남	15	20	25	15~20	
전북(공립) (사립)	14 16	18 20	22 25	16~18 18~24	
전남	15	20	22	16~20	
경북(공립) (사립)	16 16~18	22 22~24	24~26 24~26	20~24	
경남(공립) (사립)	16 19	22 25	24 28	18~20 24	
제주	15	22	26	18~22	

자료: 각 시도교육청.

위 기준에 따르면 시도마다, 설립구분마다 학급 편성 기준이 크게 다른 상황입니다. 같은 5세반 이어도 전북의 공립유치원은 22명까지 편성하나, 서울의 사립유치원 5세반은 30명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교사 1인당 영유아 기준을 전국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제시된 기준은 유치원 기준보다 적은 인원입니다.

〈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2])

연령	만1세 미만	만2세 미만	만3세 미만	만4세 미만	만4세 이상
교사 1인당 영유아 수	3명	5명	7명	15명	20명

2013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으나 지역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0여년 전의 자료임에도, 아직 이 자료에서 제시한 최대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표〉 학급당 유아 수 최저·최대 기준 제안(육아정책연구소, 2013)

	만3세	만4세	만5세
최저기준(명)	10	15	20
최대기준(명)	15	20	25

2. 문제점

이와 같은 편차는 지역별, 기관별 교육환경의 편차를 불러오며, 유아교육의 공정한 출발선 보장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위에 제시된 시도별 학급편성기준의 명확한 근거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교육통계에서는 유치원 학급 당 유아 수를 17.5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2021년 기준), 그러나 이 숫자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통계에 불과합니다.

인구 수가 적은 도서산간이나 벽지 지역, 1학급 혼합연령 공립유치원이 운영되는 지역에는 10명 미만의 소인수학급도 대다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누구에게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공교육의 책무성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소인수학급은 학급 당 유아 수 충원 여부와 관계 없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인수학급의 유아 수까지 통계에 합산되다 보니 전체 평균 숫자는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대도시의 유치원들은 과대, 과밀학급 운영으로 인한 어려움

을 계속해서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학급당 유아수의 적정 기준에 대한 심층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교육통계의 전국 평균 수치를 OECD 평균과 비교하여 크게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현장의 어려움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교육과정 수업이 4시간(240분)동안 이루어질 경우 24명의 유아가 있는 교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사가 교육과정 일과 중 1분도 빠짐없이 유아와 '상호작용만' 한다고 해도, 일대일로 상호작용할 시간이 유아 한 명당 10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교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유아와 질 높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여유가 부족한 것이 교사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생님, 여기 좀 보세요. 선생님, 이게 잘 안 돼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는 유아들의 개별 요구를 듣고만 있어도 하루가 다 가는데, 유아 24명의 개별 발달 상황을 관찰하고 놀이를 지원해주는 교육과정 운영을 해내고 있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현장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공통된 학급 당 유아 수 기준이 필요함을 협의하고자 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16조에 따라 관찰청이 정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유아들을 위해서 질 높은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현장의 상황은 배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단순히 숫자만 놓고 유아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친구들이 가득한 교실에서 부딪히고, 선생님과 눈 맞추며 이야기 나눌 시간이 부족한 현실을 외면해야 합니까?

3. 미래 유아학교의 학급 당 유아수에 관한 제언

2019년부터 현장에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를 맞이하며 유치원에서도 원격수업을 실행하는 등 유치원 교육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학급 당 유아 수를 유지한다면 질 높은 교육으로 이어지기에 분명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19를 비롯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유아들을 위한 학급당 유아 수 편성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지역별 학급당 유아 수의 최대, 최저 기준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최대 최저 기준 내에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아 수의 최대, 최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심층적인 연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초·중·고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실 증축비 및 인건비에 대한 재정 추계가 이루어졌으며,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는 '수업방식 다양화에 따른 학급 규모 분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아교육에 관련된 내용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 교육 현장의 상황에 맞는 학급 당 유아 수 감축 및 적정 유아 수 산출을 위한 이론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2019)는 초등학교 1학년 출발선 형평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기준을 17명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미래 유아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출발선 형평성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미래 유아학교의 학급 당 유아 수는 이보다 적은 15명 이하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누구보다 유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충분히 놀이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친구들과 더 많이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유아 수가 반드시 조정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유아들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적정 유아 수를 찾아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른들의 시각에서 숫자만 비교하며, 유아들이 처한 상황을 외면하는 현실은 달라져야 합니다. 미래 유아학교는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사회에 맞게, 아이들이 갖춰야 할 미래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펼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토론과 논의가 여기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유아들을 위한 의미있는 전환으로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유아) 수에 목숨을 거는가?

왕정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위원장

I. 들어가며

코로나19 상황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코로나라는 재난상황은 유치원에 무엇을 남겼는가? 우리 사회가 ‘학교(유치원)’의 의미와 기능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과거 유치원을 그저 단순하게 사교육기관과 비교하며 지식과 정보의 전달 능력의 효율성을 따지던 문화였다면, 유치원이 문을 닫자 양육과 돌봄의 부담이 가정으로 고스란히 전가됐다. 가정에선 하루속히 매일 등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절규한다. 유아들은 유치원에서 학습(놀이)와 더불어 사회성도 기르고 습관도 형성하고 제대로 된 한 끼 밥을 먹으며 함께 성장한다. 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것은 ‘놀이(학습)공백’만이 아니라 훨씬 많은 부분에서 공백을 만든다. 지금 겪는 공백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는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공백이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다.

유치원은 방역과 돌봄과 양육과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곳이다. 교육이 가능한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코로나가 던진 교육계의 과제를 임시방편으로 수습하는 것을 뛰어넘어 교육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II. 코로나 시기 교육

1. 코로나19와 학생들의 어려움

- ◎ 코로나19 이후 학생 생활의 가장 큰 변화: 미디어 사용 시간 증가¹⁾
(학습목적 68.8%, 학습 외 목적 46.7%)
- ◎ 등교하지 않는 날, 하위 30% 소득계층 학생 중 약 60%가 항상 점심을 먹지 못한다.²⁾
- ◎ 등교 중지를 기점으로 비만 관련 모든 지표들이 악화됐다.

1) 코로나19와 교육: 학교 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2020)

2) 시사인 2020

- 평균 체중이 4kg가량 증가
- 대사증후군 지표 악화: 총콜레스테롤은 160.3(mg/dl)에서 169.5로, 중성 지방은 126.7에서 160.6으로, 공복혈당 및 지방간 관련 간수치도 등교 중지 이전보다 올라3)
- ◎ 정서돌봄: 코로나 이전에 비해 걱정, 불안,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4)

2. 각국의 코로나 대응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학교 개학을 미루었다. 코로나에 대응하고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은 나라마다 달랐다.

- ◎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100% 원격수업, 1/3 등교, 1/2등교, 2/3등교로 2~3주마다 등교방법을 바꾸었다. 2021년에도 학교의 규모, 급별에 따라 여전히 등교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2021년에는 유치원과 초1~2학년은 전면 등교(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 ◎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학급 규모를 축소하여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 수를 감소시킬 것을 권고’5)한 바 있다.
- ◎ 독일은 학급당 학생 수를 반으로 줄였다. 학교 복도에선 일방통행만 허용하고, 반마다 쉬는 시간을 달리 했으며, 온라인 수업과 병행해 한 교실에 머무는 학생 수를 10명으로 제한했다.
- ◎ 프랑스는 당분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각각 10명과 15명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 ◎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교육부장관 대변인은 주 교육부가 신규교사 고용과 학급 규모 축소를 위해 1억달러 (한화 약898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영국 최대 교원노조인 ‘전국교육노동조합’의 케빈 코트니 합동 사무총장은 코로나19가 확산 되더라도 전염병에 안전한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더 많은 교사를 고용하고, 수업 장소를 추가로 물색하여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코로나 시기에도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방안

코로나19로 드러난 교육 현장의 문제를 묻는 교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장 어려운 점으로 과밀한 학급당 학생(유아) 수를 42.6%가 지적하고 있다. 교사 10명 중 8명은 대면수업에 비해 원격수업의 교육적 효과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현상황에서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학급당 학생(유아) 수 감축과 대면 수업 확대를 꼽았다.

3)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연호·김미진 교수, 김은실 임상강사 연구팀

4)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 생활 변화 실태조사(전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708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5)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학교 재개방에 대한 권고 지침 발표, 2020.6.10.

〈표 1〉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선택 2개)⁶⁾

	문항	비율
1순위	학급당 학생수 감축	55.7%
2순위	대면수업 확대	48.6%
3순위	학습량 감축	42.5%
4순위	학생 개별지원 확대	32.2%
5순위	교사증원	18.6%

같은 설문에서 교사들은 방역이 가능한 안전한 학교를 위해 학급당 학생(유아) 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라는 질문에 97.2%의 교사들이 방역이 가능한 학급당 학생(유아) 수는 ‘20명(14명) 이하’를 선택하였다.

Ⅲ. 학급당 학생(유아) 수

1. 왜 학급당 학생(유아) 수인가?

1) 학급당 학생(유아) 수는 실질적인 교육 여건의 기준이다.

교사가 학생(유아)을 제대로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여건은 학급당 학생(유아) 수이다. OECD 기준에서도 학급당 학생(유아) 수는 매우 중요한 교육 여건이라고 제시되고 있다. 반면에 교사 1인당 학생(유아) 수는 교육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보고서에서 교사 1인당 학생(유아) 수 감축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는 등 실제 교육 여건 개선 부분보다 지표 부분 개선에 중점을 두는 듯하다.

OECD 교육지표에서도 교사 1인당 학생(유아) 수가 동일한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며, 학급당 학생(유아) 수가 결정적 변수가 됨을 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확산 시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원격수업의 한계는 명확하며 대면 수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2)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14명) 상한은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의 토대이다.

학급당 학생(유아) 수 평균은 국가적인 통계를 활용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학생(유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 반 학급의 학생(유아) 수가 몇 명인가?’이지 국가적인 학급당 학생(유아) 수 평균 수치가 아니다. 교육의 질을 위해서 학급당 학생(유아) 수는 당연히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교육부는 OECD 평균값에 근접하고 있다고 하여 교육 여건이 충분히 양호하다고 말

6) [코로나19 상황, 2020년 1학기 교육실태와 교사 요구조사 보고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유아) 수를 규정하는 중요한 변수는 교원정원이다. 교원 정원을 추가로 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학급당 학생(유아) 수를 감축할 수 없기에 학급당 학생(유아) 수 문제는 교원 정원 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이다.

2. 교원 1인당 학생(유아) 수

교육부는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 모두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OECD 평균과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하였다.⁷⁾

아래 자료는 교육통계서비스에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연도별-급별 교원 1인당 학생(유아) 수와 학급당 학생(유아) 수 통계표이다. 2015년도 자료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교육부의 주장대로 교사 1인당 학생(유아) 수와 학급당 학생(유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 연도별-급별 교원 1인당 학생(유아)수와 학급당 학생(유아)수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원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원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원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2000	19.5	26.3	28.7	35.8	20.1	38	19.9	42.7
2005	17.5	24.2	25.1	31.8	19.4	35.3	15.1	32.7
2006	17	23.7	24	30.9	19.4	35.3	15.1	32.5
2007	16.2	22.7	22.9	30.2	19.1	35	15.3	33.1
2008	15.5	21.9	21.3	29.2	18.8	34.7	15.5	33.7
2009	15.2	21.6	19.8	27.8	18.4	34.4	15.7	34.2
2010	14.8	21	18.7	26.6	18.2	33.8	15.5	33.7
2011	14.6	20.9	17.3	25.5	17.3	33	14.8	33.1
2012	14.5	21.6	16.3	24.3	16.7	32.4	14.4	32.5
2013	14.3	21.5	15.3	23.2	16	31.7	14.2	31.9
2014	13.4	19.7	14.9	22.8	15.2	30.5	13.7	30.9
2015	13.4	20	14.9	22.6	14.3	28.9	13.2	30
2016	13.3	19.7	14.6	22.4	13.3	27.4	12.9	29.3
2017	12.9	19	14.5	22.3	12.7	26.4	12.4	28.2
2018	12.3	17.9	14.5	22.3	12.1	25.7	11.5	26.2
2019	11.9	17	14.6	22.2	11.7	25.1	10.6	24.5
2020	11.4	16.7	14.2	21.8	11.8	25.2	10.1	23.4

7)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안, 2018.4.

3. 교원 1인당 학생(유아) 수 vs 학급당 학생(유아)수

OECD 상위 10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유아 13.6명, 초등 18.4명, 중등 19.4명이다. 2018년에 발표된 교원증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학급당 학생(유아) 수에 관한 언급은 없다. 교원 1인당 학생(유아) 수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지만 학급당 학생(유아) 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유아) 수를 유추해 보았다.⁸⁾ 제시된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바탕으로 학급당 학생(유아) 수를 유추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유아) 수) / (교원 1인당 학생(유아) 수) 값을 구해보았다.

〈표 3〉 연도별-급별 교원 1인당 학생(유아)수와 학급당 학생(유아)수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원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원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원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2020	11.4	16.7	14.2	21.8	11.8	25.2	10.1	23.4

위에서 인용한 표를 다시 살펴보면 2020년에 유치원 교원 1인당 유아가 11.4명일 때, 학급당 유아 수는 16.7명이었다. 이 값을 바탕으로 계산해 본 2030년까지 학급당 학생(유아) 수 변화는 아래와 같다.

통계표를 보면 교사 1인당 학생(유아) 수 대비 학급당 학생(유아) 수 비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치원은 1.3배에서 1.5배까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교원 1인당 학생(유아) 수가 감소하는 만큼 학급당 학생(유아) 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교원 1인당 학생(유아) 수 대비 학급당 학생(유아) 수의 비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특수목적고	전문계고	자율고	고교평균
2000	1.3	1.2	1.9	2.1				2.1
2005	1.4	1.3	1.8	2.1				2.2
2006	1.4	1.3	1.8	2.1				2.2
2007	1.4	1.3	1.8	2.1				2.2
2008	1.4	1.4	1.8	2.1				2.2
2009	1.4	1.4	1.9	2.1				2.2
2010	1.4	1.4	1.9	2.2				2.2
2011	1.4	1.5	1.9	2.2	2.3	2.6	2.2	2.2

8) 교육통계정보서비스에 있는 '교원1인당학생(유아)수'와 '학급당 학생(유아)수' 값의 비율을 산출하여 2018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교사1인당 학생(유아)수'의 값을 바탕으로 학급당 학생(유아) 수를 추산하였음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특수목적고	전문계고	자율고	고교평균
2012	1.5	1.5	1.9	2.2	2.2	2.7	2.2	2.3
2013	1.5	1.5	2.0	2.2	2.2	2.8	2.2	2.2
2014	1.5	1.5	2.0	2.2	2.2	2.8	2.2	2.3
2015	1.5	1.5	2.0	2.2	2.1	2.8	2.2	2.3
2016	1.5	1.5	2.1	2.2	2.2	2.8	2.2	2.3
2017	1.5	1.5	2.1	2.2	2.2	2.8	2.2	2.3
2018	1.5	1.5	2.1	2.2	2.4	2.7	2.3	2.3
2019	1.4	1.5	2.1	2.3	2.5	2.6	2.3	2.3
2020	1.5	1.5	2.1	2.3	2.7	2.5	2.3	2.3

교사 1인당 학생(유아) 수를 볼 때에는 특히 교사의 정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OECD 기준 상 교사는 수업이 주 업무인 교사다. 교장과 교감은 제외되며, 휴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가 모두 포함된다. 휴직 교사를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뽑으면 이를 교사 2명으로 계산한다. 현장에서 실제 근무하는 교사보다 통계가 부풀려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도 휴직 및 기간제 교사 모두 포함하는 문제였다가 OECD에서 제외했던 교(원)장, 교(원)감, 보건·영양·사서 교사까지 망라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교육기본통계 상 교원 1인당 학생(유아) 수가 OECD 교육지표보다 항상 적게 나오는 이유이다.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도 현재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유아) 수, 학급당 학생(유아) 수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수업하는 교사 수’를 활용하여 계산한다면 더 열악한 현실이 드러날 것이다.

IV. 마무리하며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는 우리 교육에 커다란 과제를 던졌다. 학급당 학생(유아) 수 감축으로 근본적인 교육 여건 개선을 할 것인지? 또 미봉책을 통해 개혁을 이루어 둘 것인지?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한다. 지금이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회이다.

2019년 3월에 발표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의 학령인구는 정체기에 접어들어있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학령인구의 정체기는 공격적인 학급당 학생(유아) 수 감축 정책으로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기인 셈이다.

〈표 5〉 학령인구 추이

학령아동 변동 추계 통계표 (천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유치원	1,393	1,412	1,364	1,335	1,301	1,250	1,151	1,045	968	914	879	872	891	925	959	993	1,024	1,049	1,062	1,064	1,058	
초등학교	2,720	2,688	2,719	2,757	2,765	2,717	2,710	2,696	2,600	2,474	2,334	2,206	2,055	1,915	1,831	1,797	1,796	1,823	1,876	1,940	1,999	
중학교	1,578	1,457	1,385	1,340	1,318	1,358	1,373	1,361	1,358	1,379	1,398	1,354	1,325	1,292	1,240	1,143	1,037	961	908	874	866	
고등학교	1,868	1,816	1,715	1,574	1,454	1,382	1,337	1,315	1,354	1,369	1,357	1,354	1,375	1,394	1,350	1,321	1,287	1,236	1,139	1,034	958	
합계	7,558	7,373	7,183	7,006	6,838	6,707	6,571	6,417	6,280	6,136	5,969	5,786	5,647	5,526	5,380	5,254	5,146	5,069	4,985	4,912	4,881	

※ 출처 : 통계청, 2019년 3월 장래인구추계자료

학급당 학생(유아) 수 감축은 개인별·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한 수업 혁신과 교육 여건 개선의 토대이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급당 학생(유아) 수가 조만간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한다고 말하며, 교원 수 감축을 예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학급당 학생(유아) 수 평균의 지역 편차가 커서 전국 학급당 학생(유아) 수 평균 통계 수치로는 과밀학급 문제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비교과 교사까지 포함한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통계를 발표하여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이루는 정책을 그만두기 바란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의 ‘위기’일까 ‘기회’일까 교육전문가들은 ‘위기가자 기회’라고 말한다. 인구감소라는 위기를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교육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선 코로나19 국가재난 상황이 아니었어도 현재 적용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서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이 선행됐어야만 했다. 지난 20년이 넘게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급당 학생(유아) 수 감축을 위해 투입된 교육재정은 없었다. 국가부도 사태였던 외환위기(IMF)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학급당 유아 수를 33명 이하로 과감하게 감축했었다. 강력한 의지로 교육 여건을 개선했다. 돌이켜보니 탁월한 정책 판단이자 결정이었다. 그 후론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고 믿는 경제부처 관료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참담하고 암울하다. 효율성의 논리를 넘어 미래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학령인구 감소가 미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인식을 갖고 더 공격적인 교육재정 투자와 확충에 나서야만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발표 2

김경미 |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정책조정위원장

이주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중앙이사



미래 학급당 유아수 및 교사 정원에 관한 제언

김경미 |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정책조정위원장

1. 학급당 유아수 및 교사 정원 논의의 문제점

출산율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 매년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평균은 만 3세 16명, 만 4세 22명, 만 5세 25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정원대비 취원율은 약 60% 대여서 단순히 평균 정원만 가지고 학급당 유아수가 많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학급당 유아 수나 교사 정원에 대한 논의가 달갑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국·공립유치원의 입장에서는 유아수를 줄여야 한다고 하고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면 되지만, 사립유치원의 입장에서는 추가 채용해야 하는 교사 인건비 등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 행정인력, 영양교사 등 필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요청한 지 오래되었으나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비용 발생이 볼 보듯 뻔한 학급당 유아수 감축 논의는 사립유치원의 생존권이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심각한 논의인 것입니다.

2. 통계로 본 학급당 유아수

아래 표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2020년도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유치원의 학급 및 교원당 원아 수 통계자료입니다.

구 분	원 수	학 급 수	원 아 수	교 원 수	학급당 원아수	교원당 원아수
총 계	8,705	36,634	612,538	53,651		
국립	3	17	273	29	16	9
공립	4,973	12,440	178,628	19,080	14	9
사립	3,729	24,177	433,637	34,542	18	13

〈출처 : 교육통계연보 2020,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최근 교충은 학급당 유아수를 16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밝히면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위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미 공립유치원은 학급당 원아수가 14명으로, 16명보다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급당 원아수가 14명, 교원당 원아수가 9명으로 이미 초과달성되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논의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의 학급당 원아수와 교원당 원아수를 줄이거나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두어야 할 것입니다.

3. 관련 법규정으로 본 교실 면적 기준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별표 1] <개정 2017. 12. 29.>

교사의 기준면적(제3조제3항관련)

(단위 : m²)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유치원	40명 이하	41명 이상
	5N	80+3N
	교사 중 교실 총면적 2.2N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의 [별표 1]에서는 유치원의 교실에 대해 최소 유아 1인당 2.2m²(제곱 평방미터)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실들은 설립 때부터 이 기준에 맞추어져 인가되었고, 인가된 학급수 내에서 학급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적 기준에 따른 인가된 학급수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필요에 따라 학급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한다면 학급당 원아수와 교원당 원아수를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책대안과 지원이 시급

학급당 유아수나 교사 정원의 논의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같은 유치원임에도 국·공립과 사립의 이유 없는 차별은 우리나라의 대계를 생각해서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국가의 유아교육정책에서 배제된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간략히 언급했으므로 그 해결책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공·사립의 차별 없는 유치원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국·공립유치원 1곳에 재원하는 유아수가 50명~100명이라고 한다면, 국·공립유치원을 추가로 설립하고 이후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사립유치원 10곳의 1,000명 유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사립의 격차 비용을 줄이면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세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보다 더 많은 유아와 학부모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의 통계에서 보듯이 사립유치원에는 유아들이 43만 명이 넘게 재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대다수의 학부모들에게 만족을 줄 것임은 자명할 것입니다.

한사협은 공·사립 공존을 통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유아 학비지원금을 늘리고, 사립유치원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공·사립 차별 없는 유치원 정책 지원이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를 조속히 시행하기를 정책 당국에 촉구하며, 이러한 정책 지원에 불필요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시키는 것이야말로 예비 부모의 출산율을 높이고 유아의 안전과 질 높은 교육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이제는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은 다름 아닌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유아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논의가 우리나라 유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학급당 유아수와 이에 따른 교원 정원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의견(안)

이주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중앙이사

유치원 학급당 정원 축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재정, 시설 등의 근본적·구조적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정원 축소로 야기되는 문제를 오롯이 유치원에게 전가하고 학급당 정원 축소를 강요하는 교육당국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학급 당 정원 감축이라는 명제만을 바라볼 때, 대부분의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지만 내면의 문제를 외면한다면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 일선에서 묵묵히 교육현장을 지켜온 유치원 원장님부터 설립·경영자분들, 그리고 유치원 관련 모든 단체들이 학급당 정원 감축과 공·사립 유치원 원아의 차등지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눈 감고 귀 닫은 상황’에서 학급 당 정원 감축이라는 수치적 목표만을 내세운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고,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립유치원의 선호도 중 가장 큰 강점은 학부모 부담금이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부모 입장이자. 하지만 이러한 불공정 지원이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보면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은 무상교육이 실현된 공립유치원과 경쟁하며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는 약점을 극복하고자 혁신과 변화를 거듭해 오면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적용하면서 지금의 위치에 까지 발전·진화하여 온 것이다. 교육당국이 만약 무상교육을 완성하려면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것처럼 공·사립 어떠한 교육기관에 다니든 유아들의 교육비는 무료가 되어야 한다. 만약, 무상교육을 실현하지 못하고 재정이 충분치 않다면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무상교육의 기본 취지에 맞게 모든 공·사립유치원 구별 없이 어떤 기관을 다니던 소유주체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학부모 지원금으로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금이 동일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정한 출발선상에서의 선의의 경쟁과 유치원의 혁신이 유아교육 발전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자본과 돈에 대해 이야기 하면 무슨 교육기관이... 교육자가 돈만 생각하느냐며 상업적이고 속물로 몰아가기 때문에 무슨 불문율처럼 터부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私立)유치원¹⁾은 설립·경영자가 독립적인 경영의 주체로서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잘 운영·경영하여야만 유아의 교육은 물론이고 유치원에 재직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모든 교직원을 설립·경영자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 비용은 따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이를 폄하해서도 평가절하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 비리’라는 프레임을 씌워 놓은 교육 현장에서 사립유치원을 바라보는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처럼 모든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과 제도의 변화는 사립유치원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의 축소 또한 단순히 인원을 줄이는 것에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재정의 100%를 국민의 혈세, 즉 세금(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 학부모 개인 부담금, 설립·경영자의 출연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또한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재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부모를 지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부모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설립·경영자가 개인 빚으로 이를 충당해야 하고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모든 국공립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국가의 손실보존금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모든 교육기관 중 유일하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만 그 모든 책임과 손실보존을 설립자가 개인 빚을 내서라도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이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교육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입장에서 보면 학급당 정원의 감축은 결국 운영비의 부족으로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는 교육의 질적 저하와 더불어 고경력·재능 있는 교사의 이탈, 학부모의 교육만족도 저하, 유치원의 경영난 심화, 이러한 과정이 거듭되면서 결국 사립유치원의 고사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이치인 것이다. 이를 부정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이에 대한 대책 또한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질의한다.

교육을 돈과 결부해서 유치원 운영을 생각하는 것을 죄악시 터부시하는 사회적 편견과 더불어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물가상승율에 묶여 있는 제도적 모순 때문에 현재 사립유치원은 심각한 운영난과 그에 따른 많은 어려움에 직면에 있는 것이 사립유치원의 현실이다. 전체 운영비의 60%에서 많게는 70%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서 교사의 호봉 인상은 고사하고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턱없이 부족한 물가상승률을 강제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의 경영 위기를 교육당국과 정치권이 방치하고 이에 더해 비리집단으로 매도하여 그간의 유아교육을 이끌어 온 공로는 고사하고 사립유치원을 고사 위기로 내몰고 있음을 현 교육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자각해야 할 것이다.

1) 사립유치원 : 공익의 사업 기관을 개인의 비용으로 설립하여 유지함, Daum 어학사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평균
최저임금인상률	16.4%	10.9%	2.9%	1.5%	5.1%	7.36%
물가상승률	1.5%	0.4%	0.5%	현재 미정	추정 불가	0.8%

다른 문제는 기회가 된다면 다시 논의하고 싶지만 우선 차치하고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급여에 대해서 만이라도 이번 기회에 비교해 보자. 이는 사립유치원의 생존과 직결된 교사의 질과 더불어 교사의 안정적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유치원의 경영 안정화에 대한 부분으로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다.

공무원 급여인상률을 살펴보면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5년 평균 1.9%로 년 간 1.1%(5년에 5.5%)이상 차이가 난다. 얼핏 보면 물가상승률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나 그렇지 않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호봉인상분 + 급여인상률”이 반영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력 5~6년차 교사 평균 14호봉 교사가 있다고 가정하자. 2021년에는 14호봉 본봉(봉급) 2,456,000원에서 2022년에는 15호봉 2,558,800원, 즉 자연승급 호봉인상액 102,800원에 1.4% 인상 17,400원이 인상된 2,576,200원을 지급받게 된다. 거기에 정근수당(월 급여액의 0~50%, 연 2회)를 비롯하여 정근수당가산금(월 5~13만원, 추가가산금 포함),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의 0~23%),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원, 기타가족 월 2만원, 4인 가족까지 / 자녀 중 셋째부터 3만원 가산금 지급, 자녀의 경우 4인 초과 가능), 자녀학비보조수당(중고생 자녀의 학비, 분기별), 육아휴직수당(월 봉급액의 40%, 상한 100~하한 50만원), 도서·벽지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월 13만원), 직급보조비(월 7~75만원), 명절휴가비(월 봉급액의 60%, 연 2회), 연가보상비(1급 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 이내) 등 기본급인 봉급 이외에 32가지의 각종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경우 물가상승률에 따라 원비인상이 사실상 동결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함으로써 운영비의 약 2/3를 차지하는 교원의 급여가 지속적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동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됨에 따라 경험이 풍부한 고경력 교사가 현장을 떠나고 설립·운영자는 신규교사를 채용하면서 매년 교사교육에 많은 노력을 쏟음으로써 교육과정 개발과 같은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경력 교사의 이탈로 이어져 교육과정의 불안정은 물론 이는 학부모의 선택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결국 사립유치원은 고사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 가지 사례만 비추어 보더라도 교육의 한 주체로서 사립유치원이 처해있는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무리한 정책의 추진은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고사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당국이 원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립유치원의 사멸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사립유치원을 교육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는지조차도 이제는 의문이 생긴다.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 40%확충에 대한 지난날의 결과를 보면 이에 대한 답이 자명하다고 보여진다. 지난 8월 15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에 입학 가능한 원아 비율이 2018년 31.8%에서 2019년 36.1% 올해 39%로 계속해서 늘었다. 유치원

생 10명 중 4명이 언제든지 원하면 국공립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공립유치원 2352개 학급을 신설했고, 올해 500개 학급을 추가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립비용과 공정분배의 문제를 접어두더라도 문제는 국공립유치원에 자리가 늘어났음에도 학부모의 선택으로부터 외면당했다는 것이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살펴보면 2018년 25.5%, 2019년 28.5% 지난해 29.8%로 소폭 오르는데 그치며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²⁾ 만약 학급당 정원 축소가 문제였다면 현재 더 많은 유아를 학급에서 교육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급격히 설 자리를 잃었을 것이다. 결국엔 근본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더하기식·뺄셈식 처방에 그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체적으로 유아 숫자가 줄고 있고 지난해 코로나로 가정 보육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다양한 유아 교육 수요를 무시하고 정부가 기계적으로 국공립 유치원만 확대한 결과”로 정책 실패라는 지적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국공립보다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부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국공립 유치원 외형 확대에 치중했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이다.³⁾

결국, 입학정원의 축소와 무분별한 무상교육을 통한 국가주도의 획일적인 교육정책은 다음 세대의 유아교육에 해답이 될 수 없다는 방증인 것이다.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의 밀어붙이기식 강행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다양성이 살아있는 다변화된 교육과정과 변화와 혁신을 통한 미래 인재를 구현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양성이 절실하다는 것이 이에 대한 해답이다. 소유주체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교육수요자의 유아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고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 받는 국민이 없도록 최소한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자 의무인 것이다.

교육수요자인 학부모가 내 아이에게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기관이 존재해야 하고 그런 기관을 양성하고 양질의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교육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교육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모두 짓밟아 버렸다.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변화와 혁신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치열한 자기반성과 경쟁 없이는 변화와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 사립유치원의 110년의 역사는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진화해 왔다. 그러나 어느 날 이제 너희 역할을 끝났다고 한다.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은 국가가 다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는 사립유치원을 선택하고 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학급의 유아 수보다 양질의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경쟁해야 하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은 변화와 혁신의 준비가 되어 있다. 치열한 경쟁과 자기 성찰을 통해 유아교육의 한 주체로써 유아를 교육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장점을 접어두고 그렇

2) 조선일보 2021년 8월 15일 신문기사. 국공립유치원 미스터리... 정원 비율이 39%라는데, 취원율은 왜 30%?

3) - 상동 -

게 모델로 삼고 본받으라고 부르짖는 서구 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영국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의 선진국들은 예산을 공립유치원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지원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일지라도 학부모의 선택을 받지 않으면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교육예산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함으로써 공립이든 사립이든 원하는 교육기관을 직접 학부모가 선택함으로써 유치원들이 선의의 경쟁과 혁신, 다양성으로 무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자기 입맛에 맞는 선택적 정책입안이 아니라, 유아교육을 위한 초석을 닦았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설계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본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분께 사립유치원을 비롯한 모든 사립학교의 존재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소개하면서 현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까 한다.

《〈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교육의 공공성(대법원 전원재판부 99헌바63, 2001. 1. 18.) 〉》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립자가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라 하겠다.

발표 3

이중규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함미영 |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



미래 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 수에 대한 토론문

이종규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영유아들의 미래를 위한 논의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준비해 주신 육아 정책연구소의 여러분들과 연구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론을 시작하고자 한다.

영·유아 보육에 있어 교사 대 아동 비율은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교사의 질 높은 상호작용과 놀이지원은 물론 산책과 견학 등 실외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초저출산 시대에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이 되며, 이를 통해 부모의 만족도와 보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 출산율 제고와 공보육 강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이에 본 토론자는 미래 교육을 위한 준비에서 학급당 유아 수 감소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예시와 그를 통한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1. 필요성

첫째, 안전하고 건강한 공보육 서비스 제공

현재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유아반 보육교사는 1인당 최대 20명까지 보육하고 있다. 보육교사 1명이 책임져야 할 유아의 수가 과다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교사와 아동 간 상호작용 및 집중도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교사 1인당 8명의 아동을 보육하는 등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평균 약 6명까지 더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0월 인천 어린이집 놀이터 사고 등 과다한 보육아동 수로 인해 안전사고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보육교사의 업무과중이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학부모들은 보육 현장 개선 요구 1순위로 교사 대 아동비율 감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장의 보육교사들 역시 같은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데,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질 개선을 위한 연구’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80.1%가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밝히며, 학부모 의견과 동일하게 과도한 노동환경 개선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안전하고 건강한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학부모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향상,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놀이중심·아동중심 교육의 실천

개정 누리과정의 중심이 되는 놀이중심·아동중심 교육과정의 안착을 위해서는 현재 한 명의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많은 수의 유아 비율이 낮아져야 한다. 실제로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시범 사례로 제시된 어린이집은 대부분 소수집단으로 놀이를 하고 있었고, 현장에서는 1:20의 비율에서 유아들이 모두 주도적으로 놀이를 하며 배울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교사가 얼마나 될지 의문을 가지며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육현장에는 다양한 유아들이 있는데 지나치게 활동적이며 주의집중력이 짧은 유아가 있는 경우, 경계선상에 있는 유아, 문제행동을 하는 유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유아들까지도 모두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아동비율 축소가 꼭 필요하다.

현장의 원장들은 점차 자기중심성이 강하고 경계성 장애 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1:20의 아동비율은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활성화해야 하는 교사의 역할을, 유아들을 위한 '안전지킴이' 역할로 바꾸게 된다고 말한다. 아동비율을 축소하는 것만이 개별 유아 각각에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엄정애(2009)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 1인이 담당하는 유아의 인원수가 많을 경우 놀이를 관찰하거나 교사가 진정한 놀이 지원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사가 담당하는 유아의 수가 많으면 개별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기가 힘들고, 개인차를 고려한 놀이 중심 교육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윤민아(2019)의 유아교사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에 대한 어려움과 현장지원에 대한 연구에서도 교사들이 개별유아들의 놀이를 깊이 관찰하고, 적절히 지원하고, 의미 있는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을 대폭 낮추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II.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관련 시범사업

1. 서울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보조)

☐ 사업대상 : 국공립 110개소(공개모집) ※ 총 1,787개소 중 6.2%

○ 기존 국공립 : 총100개소(시 우수 보육정책 추진 국공립)

○ 신규 국공립 : 총10개소('21년 하반기 개원 예정 국공립)

※ '21년 국공립 대상 우선 추진. '22년부터 예산범위 내 민간·가정 참여 추진

☐ 추진방안

- 만0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 1:3 ⇒ 1:2
 - 2개반(6명)이상 운영 어린이집 예)2개반 6명 (3:3)⇒3개반 6명 (2:2:2)
- 만3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 1:15 ⇒ 1:10
 - 1개반(15명) 이상 운영 어린이집 예)1개반 15명⇒2개반 15명 (8:7)
- 지원내용 : 시설별 신규채용 보육교사 인건비 전액 시비 지원 (110명)
- 사업기간 : '21.7.1 ~ '22.12.31.('22년도 예산 확보시)
 - 사업 연속성 위해 시범기간 2개년도(1년 6개월) 사업으로 추진
- 소요예산 : 총 5,239백만원 ('21년 1,712백만원, '22년 3,527백만원)
- 기대효과
 - 아동 : 아이와 교사간 긴밀한 상호작용으로 아동 발달 및 정서에 도움이 되고, 놀이·야외 활동 체험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학부모 : 보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부모와 교사간 소통강화 및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만족도 향상
 - 보육교사 : 업무부담 완화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효율성이 아동교육의 질에 환원, 생태·놀이 중심 등 수준 높은 맞춤형보육 제공 가능, 궁극적으로 신규 채용 증가 및 일자리 창출 효과에 기여

2. 서초구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 주요내용 : 만0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를 위한 보조교사 지원 사업
- 신청대상 : 만 0세반 2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 국공립, 민간, 가정
- 지원규모 : 총 20개소 지원
- 지원내용 : 보조교사 인건비 월 1,011천원/인 *4대보험 비용 미포함
- 지원기간 : 2021.03~2022.02 (12개월)
-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서면)
 - 선정방법 : 별도 심의위원회 심의로 최종결정
 - 우선 선정기준 : 서초구 특화사업 및 서울시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우선 선정¹⁾
- 기타 유의사항
 - 목적 외 보조교사 배치 시 지원 중지
 - 아동학대 및 행정처분 등 중대한 운영상 문제점 발생 시 지원 중지

1) 서초구 특화사업 및 서울시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우선 : 공유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생태친화형 어린이집

3. 동작구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 목 표 :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운영으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대 상 :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 내 용

○ 상대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0세 반과 과밀 반인 3세만 축소 운영

○ 추가 개설된 1개 반 보육교사 인건비(기본급(보조급 차액), 제수당, 기관부담금) 지원

○ 0세반 (1 : 3 → 1 : 2) : 2개소 / 3세반 (1 : 15 → 1 : 10) : 2개소

□ 선정기준 : 2019년도 시범사업 운영시설 및 비교집단 참여 시설, 반 편성 가능 여부 등 고려 선정

Ⅲ.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방안

서울시의 시범사업은 담임교사를 추가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아동보육을 도모할 수 있으나, 기존 보육실의 공간에 교사가 1명 추가됨으로 인해 보육실의 면적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또한 2명의 담임교사가 협업하는 형태로 아동의 관찰과 기록, 흥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각 파악한 내용을 모두 공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서초구의 시범사업은 보조교사 1인의 지원으로 최소비용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나, 보조교사의 근무시간이 보육시간에 비해 짧고 정교사와 보조교사 간의 업무 분담 및 책임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동작구의 시범사업은 서울시와 동일하게 담임교사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 도모를 기대할 수 있으나 공간이 좁아지는 문제점을 동일하게 안고 있고, 사업비용의 부담이 있어 자치구 예산만으로는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과 시범사업 중단 시 이미 채용된 교사의 거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토론자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를 위해 교사를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연령별 아동비율의 기준을 낮추고, 현재 보육중인 초과 아동에 대한 추가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만3세의 경우, 만2세와 발달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7에서 1:15로 2배 이상 보육아동이 증가함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과 기본생활습관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만3세 보육아동 기준인원을 1:10으로 낮추어 초과인원 5인에 대한 추가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보조교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만3세의 경우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 및 배변 등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보조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보육교사는 놀이중심 교육 지원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사-유아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4세 이상의 경우, 1:20의 아동기준을 1:15로 낮추어 놀이중심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지원해야 한다.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만3세와 동일하게 추가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에서 추가보육료를 활용해 고호봉의 교사를 배치하거나, 보조교사를 고용하는 등 개별 어린이집의 특성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제안한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있어 교사의 중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OECD에서는 2015년부터 교사의 교육, 근무환경을 비롯한 교사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국제적 실태조사 및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교사의 질이 제일 중요함에 대한 공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생애 초기의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고 유아기 단계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누리과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도 교사 대 아동비율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영유아수

함미영 |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

■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비율 현황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육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인원을 연령별로 정해져 있다. 보육교사 1인이 책임져야 할 영유아수는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세, 만5세는 20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비율은 2006년 이후 무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축소된 적이 없으며 농어촌은 특례지역으로 초과보육을 허용하여 만0세 4명, 만1세 7명, 만2세 9명, 만3세 19명, 만4세, 만5세는 24명까지 보육을 할 수 있다.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반별 정원기준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원 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원 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특혜인정 범위	기본보육	4명 이내	7명 이내	9명 이내	19명 이내	24명 이내
	연장보육	7명 이내 (0세 포함시 5명 이내)			20명 이내	

※ 특례가 인정된 경우 반별 초과보육(어린이집 반편성 원칙)은 불가능함

보건복지부는 2013년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14년부터 원칙적으로 초과보육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영유아의 입소대기 상황을 고려하여 2년 정도 일시적 유예를 하기로 했으나 초과보육제도는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다.

■ 교사 대 아동비율 문제점

1. 양질의 보육을 기대할 수 없음

기존의 영유아교육 방식은 교사가 미리 계획한 학습방식에 영유아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영유아의 창의성이나 호기심을 충족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누리과정 도입으로 영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변화 되면서 영유아가 직접 놀이를 선택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영유아들이 직접 활동을 선택하게 되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즐거운 환경에서 성취감과 사회적 유대감을 느끼면서 문제해결능력 및 사회 정서적 역량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좋은 교육과정이 안타깝게도 보육 현장은 온전히 아이들만을 위한 최고의 보육의질을 담보 할 수 없는 정책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여전히 보육교사의 희생과 봉사, 사명감, 책임감, 열정만을 요구하고 있다.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의 수가 많아질수록 보육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하루 종일 좁은 교실에서 많은 영유아를 돌보며 제대로 된 휴게시간 없이 온갖 서류업무를 해야 하는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더욱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2. 안전사고의 위험

또한 많은 영유아를 혼자서 보육하는 상황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하여 특정 영유아를 돌보는 과정에 많은 영유아들이 방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도 크다.

이러한 위험성은 보육교사, 원장, 학부모들도 인식하고 있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2020년 11월 어린이집에서의 안타까운 사고로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의 질을 지적하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10조)상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의 청원이 올라왔고 20만 명이 넘는 학부모, 보육교사, 원장 등 다양한 시민들이 동의를 하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차관을 통한 정부의 답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아동 안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청원 취지에 공감은 했지만 이어서 내놓은 답변은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가 아닌 보조교사 추가 배치와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영유아를 관찰·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하였다.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보조교사도 보육교사의 안전의식 제고도 아닌 바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다.

3. 영유아의 발달시기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보육환경

영아기는 신체적, 심리적 성장이 급속하게 발달하는 시기로 보육교사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발달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영아를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있게 하여 언어 능력 향상과 긍정적인 사회성도 발달하게 된다.

유아기는 영아기의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밑거름으로 보육교사와 함께 탐색하고 활발한 놀이활동으로 성격형성과 긍정적인 사회관계 및 언어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인의 보육교사가 보육해야 할 영유아의 정원이 많아 영유아 개인의 특성과 발달 과정을 세세히 관찰하고 안정적인 긍정적 신체적, 심리적 상호작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보육환경이다.

■ 보육지부가 요구하는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 인원

반별 정원기준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원 칩	2명	3명	5명	8명	11명	14명

아동중심의 시선에서 1:1 보육수준의 보육의 질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맞춤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선 영유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넓은 공간과 영유아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1인의 보육교사 눈에 온전히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이 필요하다.

보육교사 1인이 책임져야 할 영유아수는 만0세 2명, 만1세 3명, 만2세 5명, 만3세 8명, 만4세 11명, 만5세 14명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초과보육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농어촌 원아모집의 어려움 호소만을 이유로 반별 정원기준의 원칙마저 깨고 초과보육이라는 허들을 허용하는 것은 영유아의 안전권과 보육의 질을 완전히 무시하고 탁상행정이 만들어 낸 잘못된 정책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들이 양질의 보육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껏 늘 그래왔듯이 예산 문제로 아이들의 안전과 양질의 보육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지침 개선과 함께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이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 보육교사가 바라는 미래의 보육현장

어린이집 현장에서 요구하는 0순위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로 양질의 보육과 영유아가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보육교사를 필수노동자에 포함하고 보육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육정책은 늘 사용자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만을 강조하고 책임감, 사명감, 열정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보육전문가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보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

■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 행복하게 맡길 권리!

영유아는 보육교사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을 듬뿍 받아 행복한 성장을, 보육교사는 고용안정과 역량강화로 직무에 책임감을 갖고 보육전문가로서 자존감이 회복되어 존중받고 사회적 인정을, 학부모는 양질의 보육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미래가 되길 기대해 본다.

발표 4

도승숙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부지부장



학부모의 시선으로 바라본 영유아 교육

도승숙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부지부장

우리나라의 저 출산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현 중2학년을 기점으로 인구절벽의 시대가 다가왔다. 2000년대 이후로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가운데도 교육 정책만큼은 발전이 없어 보인다.

우리가 논의 하는 유치원, 보육에서의 학급 당 학생 수에 대한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몇 년간 끊임 없이 이야기 되고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서도 나서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아 교육은 2012년 우리 큰 아이가 누리과정의 시작으로 어리이집을 다니던 때와 2021년 현재와 달라진 것이 없다. 여전히 교사는 적정인원 보다 많은 원생 수에 힘들어하고 보육과 교육은 통합되어 있지 않다. 아이들은 다니는 기관에 따라 다른 혜택을 받고 있다. 누리 과정의 시작으로 유보통합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그 차별과 발생되는 갈등은 더욱 심해져 가고 있다.

이 사이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과 부모들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권리이다. 이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이 공공재라는 본질을 나타낸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교육에 시장이라는 말을 더해 교육도 하나의 소비되는 서비스로 취급하고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교육 서비스라고 본다면 교사는 자신이 돌볼 수 있는 적절한 유아수 보다 더 많이 돌봐야 한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부모는 아이에게 훨씬 좋은 상황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야하며 반면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의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열악한 교육을 받는 것은 당연시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장경제 체제의 논리가 교육에도 적합한 것인가?

바뀌는 교육 정책들은 보면 항상 갈등을 그대로 둔 채로 덮기에 급급한 혹은 더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해결책(?)들만이 제시되고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에 따져들어가면 이해관계의 문제고 결국은 돈 문제라고 보인다. 헌법에까지 명시한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교육은 투자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복지다. 당연히 누구나 빈부 격차가 있더라도 교육에서만큼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영유아기 특히 인격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의 안정적이고 양질의 교육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에 적절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에서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특히나 여성의 경제 활동이 보편화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사회적인 지원, 즉 양질의 교육환경은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부모들은 사회로 끌어낸다면 내 아이를 믿고 맡겨서 잘 성장시키고 안심하며 교육시킬 공간이 지원되는 것-복지 시스템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자녀의 양육을 여전히 여성-엄마들에게 맡겨 놓은 채로 사회적 책임에서 회피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논의 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나 ‘교원 정원’의 사회적인 합의란 누구의 합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미 많은 부모들과 교사들이 문제를 제시 하였고 많은 나라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초등에서도 20명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의 국가들에서 영유아의 교사당 인원수는 10명을 넘지 않는다.

학급당 학생수(OECD 교육지표 2020)

	초등학교	중학교
최상위 국가	15.7명	15.8명
상위 10개국	17.8명	19.2명
EU23 평균	19.9명	21.0명
OECD 평균	21.1명	23.3명
학급당 20명 이하	14개국	8개국
한국	23.1명	26.7명

* 2018년 데이터 ** 최상위 : (초)코스타리카, (중)라트비아

*** 상위 10개국 : OECD 자료로 산술평균 산출  에듀인뉴스

영유아 교육에서 특히나 현재의 놀이 중심교육에서 한 교사가 20여명의 아이들을 돌보며 교육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나 이번 코로나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심한 상황에서는 방역과 교육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현장의 어려움이 컸으리라고 보인다. 뻔히 보이는 현장의 어려움을 왜 경제적 논리를 들이 대서 회피하는 것일까? 이러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은채로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을까?

지금도 많은 학부모들과 교사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학부모가 나서야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교사가 바뀌어야 한다고 혹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결국 정책과 시스템의 문제이다. 교육부와 행정부, 혹은 국회에서 법을 고치고 투자와 지원을 해야만 해결되는 이야기인 부분이다. 좋은 교육으로 훌륭한 시민을 키워내는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받기를 바라는 것이 혹은 좋은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인지 학부모들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어 교육환경이 개선되기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고 즐겁게 웃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희망한다.

MEM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MEMO

[illegible]

MEM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MEM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제3차 KICCE 정책 토론회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1차 토론회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 수